

혁명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자본주의 철폐!**

**야권연대 반대!
노동자혁명당 건설!
노동자권력 쟁취!**

■ 발행일 : 2012년 12월 4일(화) ■ 발행처 :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 블로그 : blog.jinbo.net/wrp ■ E-mail : wrp@jinbo.net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정리하고 비정규직 철폐’ 강령은 ‘자본주의 반대/철폐’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되면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선투본’)의 대선투쟁강령 중 ‘재벌 몰수 사회화(국유화)’,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 요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비록 대선 정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차원은 아직 아니지만 ‘선투본’에 대한 질문이 주로 위 두 강령에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위 두 강령이 객관적으로도 ‘선투본’ 강령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물론 ‘선투본’ 입장에서는 나머지 강령도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은 것이 없지만 이 두 강령에 특히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재벌 몰수 사회화(국유화)’가 관심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몰수’가 갖는 ‘급진성’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객관적으로 ‘재벌 몰수’가 현대선 정국 전체의 핵심 쟁점인 ‘경제민주화’, ‘재벌 개혁’과 마주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 얼마간은 작용했다고 보인다. 맞다. ‘재벌 몰수’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에 맞선 강령이다. 지금 지배계급 사이에서조차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의 모순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른바 ‘복지국가’는 파탄난지 오래다. 신자유주의가 그래서 등장했지만 신자유주의도 파산했다. 세계자본주의 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재벌 몰수’라는 말이 낯설 수는 있지만 더 이상 급진적인 것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현재의 위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에서 노동자계급이 생존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이 요구들을 지켜들어야 한다.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가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철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철폐’는 ‘몰수’처럼 급진적이거나 낯설어서가 아니라 그것의 ‘현실성/가능성’을 묻는 차원이 대부분이다. 알다시피 ‘철폐’는 ‘요건 강화’와 ‘차별 해소’에 대한 응대다. ‘정리하고/비정규직’ 문제가 ‘요건 강화’나 ‘차별 해소’로는 도저히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즉 ‘철폐’가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그만큼 설득력을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지난 15년 이상 노동자계급의 투쟁 속에서, 투쟁을 통해 대중적으로 확인/확정된 것이다. 지금도 쌍차, 현대차비정규직, 장기투쟁사업장 주체들이 이 요구들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 따라서 당장의 현실성/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 실현될 때까지 ‘철폐’ 요구는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

위 두 강령을 두고 급진적이다. 현실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제 거둬들어야 한다. 지금의 정세에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의 의식과 역량에 비춰 두 강령을 기각하는 것이 마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현실과 무관하다. 특히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가능하냐고 묻는 것도 잘못된 질문이다. 그렇다고 당장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무상 시리즈’와 같이 처음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보편화/일반화되지 않겠냐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 두 강령을 노동자계급의 당면 강령으로 전면화/대중화시키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단지 원칙이나 추상에만 가둬서도 안 된다. 이 강령들은 혁명적 정세에서나 가능하며 일상적인 정세에서는 오히려 대중들로부터 고립만 가져올 뿐이라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반대로 묻겠다. 지금의 정세가 정말 ‘진보민주개혁’을 전략적 목표로 삼아야 할 때인가? 노동자계급이 여전히 ‘진보민주개혁’을 위해 노동자계급 독자의 강령을 내걸고 투쟁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유보해야 할 정세인가? 노동자계급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노동자계급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재벌개혁’이 있을 수 있으며 가능하겠는가? 이미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의해서, 아니 그들의 죽음과 땀과 고통으로 어렵게 다시 쟁취한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 요구(강령)를 ‘요건 강화’, ‘차별 해소’ 정도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하며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아니다. 정말 아니다.

지금 세계자본주의는 누구의 눈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어떤 일국도, 지역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위기는 일상적 위기가 아니다.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이며 끝 모를 위기다. 한마디로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다. 아직 혁명이 지체되고 있다고 해서,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이 위기가 진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때문에 노동자계급이 겪고 있는, 겪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거나 커지고 있다. 이게 주관적인 생각인가? 그렇다면 지금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숱한 계급투쟁은 무엇이란 말인가? 당장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탑투쟁은 이와 무관한 한국적/일시적 현상일 뿐인가? 자본간, 국가간, 지역간 점증하는 그리고 심화되는 대립과 경쟁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어떤 자본도, 어떤 국가도, 어떤 지역도, 그 어떤 지배계급도 지금 위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니 답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현실이고 과학이고 객관이다.

‘재벌 몰수 사회화(국유화)’, ‘정리하고/비정규직 철폐’는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더는 늦추어서는 안 되는 당면한 강령이다. 이들 강령을 자본주의 반대/철폐 투쟁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럴 때에만 당면 강령으로서의 의미를 살려 나갈 수 있다. 이들 강령은 이미 반자본주의 강령이다. 자본주의 체제 경계 위에서 있는 강령이다. 다만 다시 체제 안으로 수렴/흡수될 것인지, 아니면 체제를 변혁하는 길로 나아갈 지를 남겨두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순전히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에 달려 있다. 그 누구도 노동자계급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박근혜는 물론이고 문재인도 물론이다.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진보정당 역시 자본가정당의 들러리 역할을 함으로써 현 정세를 낳는데 일조했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에게서 투쟁성과 계급성과 독자성을 앗아가고, 노동자계급을 ‘진보민주개혁’ 틀에 끊임없이 가둬 왔다.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진전되는 것을 막아왔다. ‘진보정당’들 사이의 차이는 별다른 의미도 없다.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자계급은 자본과 국가에 의해 포위되어 있다. 개량주의 세력에게 에워싸여 있다. 노동자계급은 지금 이러한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주장이야말로 한가한 소리다. 노동자계급이 고립된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정세의 한 복판에 모두 함께 뛰어들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가 한꺼번에 이 고립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물론 그리 멀지 않은 어느 때에는 그럴 수 있으며 그 때야 한다. 그러나 저절로 그럴 수 없다. 의식적인 노력과 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도 노동자계급 전체(자체)를 대신해 줄 수 없지만 누군가는, 어디선가는 반드시 먼저 시작해야 하며 앞장서야 한다. 말로는 자본주의 반대/철폐를 말하면서도 실천에서는 야권연대에 굴복한다면 진보정당과 다를 게 없다. 야권연대 반대 이유가 자본주의 반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면 결국 야권연대로 기어들어갈 수밖에 없다. 노동자계급의 강령을 내걸지 않고, 아니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반대/철폐를 말하는 것은 정말이지 아무 것도 아니다.

혁명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는 노동자 통제 아래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재벌 개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그런데 이 두 사안이 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어 있으며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재벌이야말로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토대이자 권력이다. 오죽하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다 생겼겠는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끄떡도 하고 있지 않는 현대(정몽구)만 봐도 단박에 알 수 있다. 한국의 30대 재벌, 더 좁혀 10대 재벌을 빼고 한국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이 한국자본주의(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근간이다. 이를 배경으로 재벌은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엄청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부를 독점하고 있다.

알다시피 지난 IMF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도 ‘재벌개혁’이 등장한 바 있다. 당시에 소위 진보진영 일각에서 재벌해체를 목소리 높여 주장했다. 애기 인즉슨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영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수 일가에 의한 지배구조를 깨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재벌구조가 자본주의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지는 않다. 한국의 재벌(체제)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한국독점자본의 구체적 축적/경영/소유 양식으로서, 거기에는 숭한 문제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바로 그 재벌구조(체제)가 한국자본주의를 이끌어 왔다. 한국자본주의는 재벌을 통해, 재벌과 함께 자본축적을 이루어왔으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그 과정에서 재벌에게 수많은 특혜가 주어졌으며, 재벌은 그렇게 키운 힘으로 온갖 전횡과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에게 엄청난 탄압과 억압을 가하고 있다. 바로 이런 현실 때문에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나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판 데, 더 깊숙한 데 있다.

무엇보다 ‘재벌개혁’은 특히 노동자계급에게는 실체가 없는 허구다. 지배계급 사이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재벌개혁’이란 노동자계급에게는 ‘조삼모사’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막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 ‘총액출자제한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기업지배구조개선’ 등 현란한 말들에도 불

구하고 노동자계급에게는 그저 ‘말의 성찬’일 뿐이다. 여전히 정리하고/비정규직은 그대로고, 노동유연화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탄압은 더 거세지고 있으며 노동기본권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저들이 말하는 ‘재벌개혁’이란 이런 현실을 가리기 위한 일종의 성동격서에 불과하다. 실제 박근혜가 지난 총선 때부터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과정이 그러하다. 그 직전만 하더라도 ‘희망버스’, ‘희망텐트’ 투쟁을 비롯해 정리하고/비정규직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노동자 민중의 실질적 요구가 힘을 얻고 있었다. 이명박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견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바로 이런 현실에서 등장한 것이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다. 노동자계급의 저항과 투쟁을 잠재우기 위해, 나아가 노동자계급이 처한 현실을 역으로 이용해 그것들을 집권 전략으로 사용하고 자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은 ‘재벌개혁’이 허구라고 해서 ‘재벌개혁’이 등장하게 된 정세까지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오히려 노동자계급은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맞서는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강령을 전면으로 내걸고 투쟁해야 한다. 지금 정세에서 ‘재벌 몰수’는 단지 선전 차원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핵심적인 투쟁강령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그동안의 투쟁에서 ‘재벌 몰수’를 내걸지 않았다고 해서 망설일 이유가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세가 노동자계급에게 ‘재벌 몰수’를 내세우고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이후를 둘러싸고 자본과 노동 사이에 일대 계급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그 때문에 지배계급조차도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자본주의 4.0’ 등을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얼굴을 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4.0이란 노동자계급에게는 야만의 세계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노동자계급에게 ‘재벌 몰수’ 강령은 ‘반자본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자, 자본주의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교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재벌 몰수’가 가능하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재벌 몰수’에 따르는 국유화(사회화)는,

특히 공황 시기에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일어나는 그러한 국유화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의 국유화는 ‘손실의 사회화’(노동자계급에게로의 위기전가)에 불과하며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한편 ‘재벌 몰수’는 은행/금융사의 단일은행으로의 국영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분리되지 않는다. ‘금산분리’ 자체가 허구다. 자본주의 위기는 거의 신용(금융)위기의 형태로 등장하지만, 금융위기는 그 전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금융통제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가 극복될 수 없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위기를 금융제도/기법을 통해, 즉 허구적(가상) 자본을 통해 위기를 지연/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온갖 투기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투기의 대상이 무엇이든 투기가 위기를 낳는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반대로 위기의 결과로 발생/진행되는 것이다. 투기와 투자를 구별한다는 것은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기는 자본주의의 한 구성부분이다. 국가가 취하는 화폐/조세/재정/환율/산업/무역 정책으로도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를 언제까지나 제어/통제할 수 없다. 국가의 민주화나 부르주아 정치 쇄신을 통해 자본주의 위기를 막을 수도 극복할 수도 없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정치가 개량주의 정치다. 자본주의에서 위기는 반복된다. 만약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노동자계급이 언제까지나 끄직한 상태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에서 위기가 반복된다고 자본주의가 저절로 붕괴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노동자계급의 의식적이고 올바른 투쟁을 통해서만 붕괴시킬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말하는 ‘재벌 몰수 국유화(사회화)’ 강령은 노동자 통제와 결합되어야만 한다. 노동자 통제 아래가 아닌 국유화는 노동자계급의 강령과는 거리가 있다. 노동자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권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동자 통제 아래 ‘재벌 몰수 국유화’가 시행되는 상황 아래에서도 자본주의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정세가 있을 수 있다.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에 이중 권력 상태가 존재하는 정세가 그렇다. 그러나 그 시기는 오래 갈 수 없다. 권력은 계급이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권력은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을 지배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으며 유지가 가능하다. ‘재벌 몰수 국유화’, 은행/금융사의 단일은행으로 국영화해야 한다는 것은 곧 생산수단을 노동자계급이 통제/장악(사회화)해야 한다는 것이며, 결국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체제)를 폐절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사적 소유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은 소유 일반을 폐기하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소유(잉여가치의 전취)를 제거하는 것이다. ‘재벌 몰수 국유화’는 이상과 같은 의미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강령이다.

혁명